

15. 지방직 사회 해설

김대근 강사

[15년 지방직 사회 총평]

2015년 지방직 사회 과목의 전반적인 출제의 흐름은 이리합니다. 수능에서 강조되는 논점을 중심으로 반복해서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령 법과 정치에서 주택임대차, 국민참여재판, 미성년자의 법적 보호, 위법성조각사유, 헌법재판소, 국민의 기본권, 정부형태, 국제연합 등과 경제에서의 생산가능곡선, 총수요와 총공급, 실질GDP와 물가지수, 수요의 가격탄력성, 실업률과 경제 성장률 등과 사회문화에서 기능론과 갈등론, 일탈이론, 핵가족과 확대가족, 사회명목론과 사회실재론 등은 내년에서도 반드시 출제되는 영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이번 지방직 시험은 상당히 예측가능한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직 및 서울 지방직 시험에 비하여 수험생들이 풀어내기가 용이하게 구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과 정치(10문제), 경제(5문제), 사회문화(5문제) 중 경제의 비중이 작으면서 복잡한 계산문제가 없어서 더욱 평이한 시험이었다고 생각됩니다.

[1번 해설] ①

① 소액사건심판은 소송가액이 2,000만원 이하인 사건이 대상이다.

[2번 해설] ③

③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발한 배심원이 법관과 함께 사실인정과 양형인정에 모두 참여하되, 배심원의 의견이 법관에게 권고적 효력만을 갖는다. 재판장은 판결선고시 피고인에게 배심원의 평결결과를 고지하여야 하며,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3번 해설] ④

① 부동산등기부는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② 주택임대차계약서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작성하면 되고, 반드시 부동산 중개업자의 입회 필요 없다. ③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주택의 인도(입주)와 전입신고(주민등록)와 확정일자까지 갖추어야 한다.

[4번 해설] ④

① 정당방위 ② 정당행위 ③ 피해자의 승낙 ①②③은 위법성조각사유이다. ④ 강요된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나 책임이 조각된다.

[5번 해설] ③

ㄱ. 미성년자가 혼인을 통하여 성년의제가 되더라도 공법상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미성년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 따라서 결혼한 만 18세의 A는 국회의원선거권이 없다.

ㄴ.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임금 청구가 가능하다. 사용자는 미성년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불

해야 하며, 부모의 대리 수령은 금지된다.

ㄷ.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ㄹ.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술을 구매할 수 없다.

[6번 해설] ④

A는 헌법재판소를 의미한다. 헌법재판소의 권한에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위헌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이 있다.

[7번 해설] ①

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기본권으로 자유권이다. ② 사회권에 대한 설명이다. ③ 청구권에 대한 설명이다. ④ 참정권에 대한 설명이다.

[8번 해설]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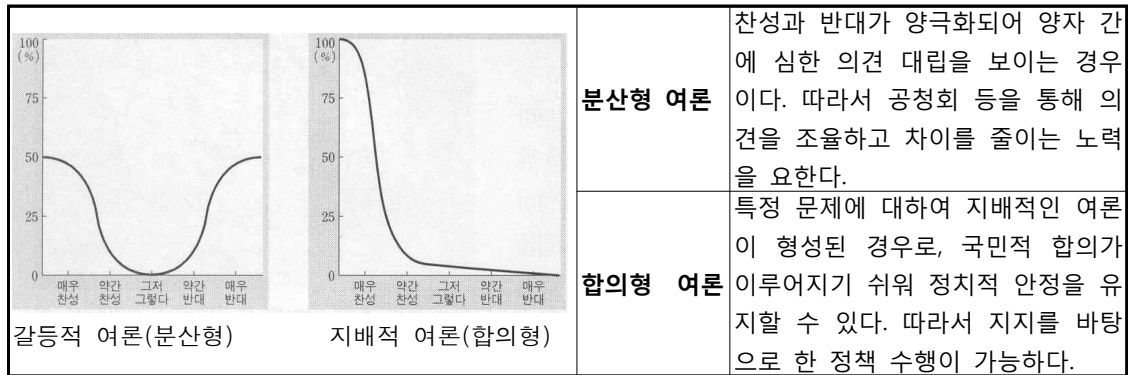
A는 국제연합, B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한 설명이다.

①② 국제연합은 초국가적 행위체, 정부간 기구, 범세계적 기구, 포괄적 목적의 기구이다. ③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 연합의 사법기관으로, 국제법을 적용하여 재판을 하는데, 분쟁의 해소는 분쟁 당사국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④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 연합의 실질적 의사결정기관으로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전권을 가지고 있으며 5개 상임 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과 10개 비상임 이사국(대륙별로 안배하여 선출)으로 구성된다. 국제 분쟁 당사국이나 침략국에 대해 평화적 해결안을 권고하고, 권고가 효력이 없을 시에는 경제적 제재나 군사력 사용 등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한다. 15개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상임이사국 중 한 국가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건은 부결된다.

기준	분류	내용
주체에 따른 분류	정부 간 기구	국가 혹은 정부의 대표를 회원으로 함 ex) 국제 연합(UN), 세계무역기구(WTO), 유럽연합(EU)
	비정부간 기구	국가 내의 개인 또는 집단을 회원으로 함 ex) 그린피스(Greenpeace), 국제사면위원회(AI), 국제 적십자사(IFRC), 국경 없는 의사회(MSF) 등
지리적 범위에 따른 분류 (관할범위)	범세계적 기구	전 세계를 참여 범위로 함 ex) 국제연합(UN), 국제축구연맹(FIFA),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세계무역기구(WTO) 등
	지역적 기구	특정 지역 내의 국가들로만 구성됨 ex) 유럽연합(EU),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아프리카 단결기구(OAU) 등
목적에 따른 분류	포괄적 목적의 기구	국제 평화와 안전, 경제, 사회, 문화 등 포괄적이고 다면적인 목적을 추구함 ex) 국제 연합(UN), 아프리카 단결기구(OAU), 유럽연합(EU) 등
	특별한 목적의 기구	제한적이고 전문적인 기능을 가짐 ex)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군사적 목적), 세계보건기구(WHO-인도적 목적), 국제통화기금(IMF-경제적 목적) 등

[9번 해설] ③

(가)는 합의형 여론, (나)는 분산형 여론이다.



[10번 해설] ②

② 우리나라 국회는 정부에 대한 내각불신임권이 없다.

◆ 우리나라 정부의 의원 내각제 요소

국무총리 및 국무회의제	헌법 제86조 【국무총리】 ②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 제88조 【국무회의】 ①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 우리나라 국무회의 : 심의기관
국회의 국무총리 임명 동의권	제86조 【국무총리】 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	제63조 ①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직 가능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국무총리 · 국무위원의 국회 출석·발언권 국회의 국무총리 등의 출석·발언 요구권	제62조 ①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81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대통령의 임시국회 소집 요구권	제47조 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국무위원의 부서권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

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11번 해설] ②

- ㄱ. 생산요소(ex 노동, 자본 등) 투입량을 늘리거나 신기술을 개발한다면 생산가능곡선이 원점에서 멀어지게 된다(바깥쪽으로 팽창한다).
- ㄴ. 생산가능곡선 내부에 있는 D점은 생산이 가능하나 비효율적인 점이다.
- ㄷ. A에서 C로의 이동은 X재의 추가 생산에 따라 포기하게 되는 Y재의 생산량을 의미한다.
- ㄹ. 생산가능곡선 외부에 있는 E점은 현재의 생산요소와 생산기술 수준으로는 불가능한 점이다.

[12번 해설] ②

(가)는 총수요 감소, (나)는 총공급 증가를 의미하는데 (가)의 변화가 (나)의 변화보다 훨씬 크므로 물가수준 하락, 국내총생산 감소의 효과를 가져 온다.

[13번 해설] ②

2011년도 실질 GDP는 기준연도 가격(2010년도 2원)과 생산량 1,500개를 곱하여 3,000원이다. $GDP\ deflator = (명목\ GDP \div 실질\ GDP) \times 100$ 이므로 2011년 GDP 디플레이터는 $(4,500/3,000) \times 100 = 150$ 입니다.

[14번 해설] ①

$$※\ 수요의\ 가격\ 탄력성 = \frac{수요량의\ 변화율}{가격의\ 변화율}$$

$$※\ 수요의\ 소득\ 탄력성 = \frac{수요량의\ 변화율}{소득의\ 변화율}$$

•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 양(+)이면 정상재이고, 음(-)이면 열등재이다.

컴퓨터에 대한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1.5이므로, 소득수준이 10% 하락하면 수요량은 15% 하락한다. 이 때 이전과 동일한 컴퓨터 소비수준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컴퓨터 수요량을 15% 증가시켜야 한다. 따라서 컴퓨터 가격을 15% 인하해야 한다.(왜냐하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0이므로)

[15번 해설] ④

- ① 물가상승률이 양수이므로 물가가 오르고 있다. 경제성장률도 양수이므로 경제도 성장하였다. 따라서 총수요가 증가하였다.
- ② 물가가 상승하였으므로 화폐가치는 하락하였다.
- ③ 실업률만으로 실업자의 수를 알 수 없다.
- ④ 2014년 경제성장률(=실질GDP 증가율)이 2014년 인구증가율보다 크므로 1인당 실질 GDP는 증가하였다.

[16번 해설] ④

사회적 불평등에 관한 갈등론적 관점이다.

ㄱ과 ㄴ은 기능론적 관점이다. ㄷ과 ㄹ은 갈등론적 관점이다.

◆ 사회구조를 보는 관점

구분	기능론	갈등론
기본입장	• 사회는 하나의 통합적 체계 • 사회구조는 상호 의존 관계 • 사회의 존속과 유지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	• 사회구조는 대립·갈등의 관계 • 지배집단이 피지배집단을 강제·복종 • 구성 요소들 간에 권력이 불평등하게 배분
기능	사회의 존속과 통합에 기여	• 지배집단의 이익만 보호 • 피지배집단에 대한 억압
갈등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몸이 병에 걸린 것과 마찬가지로 비정상적인 상태	• 사회의 보편적 현상 • 다른 이해관계를 지닌 집단들은 서로 투쟁하면서 자신의 이해관계에 맞는 사회 구조를 만들어 내려고 하는 사회 변동
사회구성원의 역할	사회구조는 합의된 것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함	지배집단의 규정에 의한 강제
한계점	• 현상 유지에만 중점을 두고 사회 변화를 부정함 • 사회적 격차를 정당화하며 현존하는 갈등 상황을 설명하는 데 한계	• 사회 구성원 간의 협동과 조화를 소홀히 함 • 사회의 존속과 통합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음

[17번 해설] ②

② 목적전치현상은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규약과 절차, 과업의 전문화, 위계의 서열화 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절차와 방식을 갖추는 일에만 몰두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는 규칙, 절차의 지나친 중시로 비효율성을 야기하게 된다.

[18번 해설] ②

② 일탈적 하위 문화에 노출(접촉)될 때 일탈로 나아간다는 이론은 차별적 교제 이론이다.

[19번 해설] ③

① 2세대 가구에는 핵가족과 확대 가족이 섞여 있으므로 핵가족의 수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② 총 가구수 만으로는 총 인구수를 알 수 없다.

③ 1인 가구 총 인구수는 A지역은 3,000명, B지역은 3,500명이므로 A지역이 더 적다.

④ A지역의 경우 총가구(10,000)에 대하여 1세대 가구(4,000)의 비율은 40%이고, B지역의 경우 총가구(8,000)에 대하여 1세대 가구(4,000)의 비율은 50%이므로 A지역보다 B지역이 더 높다.

[20번 해설] ④

(가)는 사회명목론, (나)는 사회실재론이다.

①② (나)에 대한 설명이다. ③ (가)에 대한 설명이다. ④ 사회는 그 자체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 요소로 환원될 수 없다고 보는 이론은 사회실재론이다.

◆ 사회명목론과 사회실재론

사회명목론(社會名目論)	사회실재론(社會實在論)
• 사회에 대한 개인의 우월성을 강조 • 사회는 이름에 불과하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개인 • “전체는 부분의 합과 같다.” • 사상 - 개인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 이론 - 사회계약설 • 홉스, 로크, 루소 • 사회 문제, 일탈 행동의 원인은 개인의 잘못된 의식에 있음 • 개개인의 특성이 사회의 특성을 결정함 • 사회 현상을 설명할 때 개인의 의식, 정서, 심리 상태를 중시함	• 사회란 개개인의 합을 뛰어 넘는 그 이상의 독립적 실체 •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이다.” • 사상 - 전체주의, 집단주의, 국가주의, 민족주의 • 이론 - 사회유기체설 • 뒤르켐, 콩트, 스펜서 • 사회 문제, 일탈 행동의 원인은 잘못된 사회 구조나 제도에 있음 • 사회의 특성이 개인의 특성을 결정함 • 사회 현상을 설명할 때 구조적·사회적 요인을 중시함
로크(Locke, J.) : “시민 사회는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인위적인 산물이다. 사람들은 자연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하고 자신들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더 안전하게 지키고 누리기 위해서, 각자가 스스로 동의한 계약에 따라 시민 사회를 형성한다. 이 때, 사회 성원 각자가 시민 사회에 양도하는 권력은 시민 사회가 그 역할을 수행할 정도에서 그쳐야 한다.”	히틀러 (Hitler, A.) : “국가나 민족을 떠난 개인이나 계급은 존재하지 않으며, 개인은 국가나 민족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국가나 민족은 단순한 강제 조직이나 권력 기구가 아닌 전체로서의 공동체이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는 국가나 민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고, 국가나 민족이 허용하지 않는 자유는 존재할 수 없다.”